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이 정도면 한계를 넘어섰다. 새로운 국정 농단 정황과 사례가 매일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노와 한숨을 넘어 헛웃음만 나온다. “이게 나라냐”는 말은 이제 자연스럽다. 국정의 중심이 되어 할 대통령이 민심의 신뢰를 상실했다. 지지를 5%의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처지다. 오히려 2선 퇴진과 탄핵의 대상이 됐다. 경제·민생 위기와 북한 핵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을 안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이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국정 농단 사태의 본질을 보자.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오만한 국정 시스템의 붕괴를 볼 땐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그것

위기 극복의 동력은 촛불이다

도 어느 정도 안정할 만한 인사가 아닌 오랜 인연을 함께 한 사이비 교수 일가와 권력을 나눴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유출됐고 수정됐으며, 종종 우주·훈·기운 등 사이비 종교 색채가 짙은 단어가 들어갔다.

막장 드라마로 전락한 국정

사유화된 권력은 정부 인사와 정책에 곱방이처럼 퍼져 갔다. 청와대와 정부 및 산하기관에 최순실 씨 인맥이 포진했다. 최 씨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옷을 벗기도 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융성이라는 국가 정책 이면에는 최 씨와 주변의 이권 사업이 뿌리를 틀고 있었다. 최순실 씨가 배경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 행사도 사유화된 권력의 먹잇감이 됐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근간을 흔든 주체가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국정 농단의 주역이다. 무능했다. 대통령의 일탈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눈을 감았다. 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 농단 사태를 인지하지 못해 저잣거리의 비웃음을 샀다. 일부는 비선 실세에 머리를 조아렸다. 안중

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최순실 씨 이권 사업의 실무자 역할을 했다.

인사 검증과 대통령 주변을 관리해야 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당당하다.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서 걸끄러운 질문을 하는 기자를 노려보려는가 하면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수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과 18년을 함께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창구가 됐다. 대통령의 참모이자 국가의 공복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도덕성 및 국가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도 공범이다.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선의 국정 농단을 방치하고 비호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는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된 증인 신청 막기에 바빴다. 청와대와 주종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으로 갈려 당내 기득권 싸움에만 골몰했고 이는 현재도 진형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집권당 이정현 대표는 분노한 민심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대통령과의 의리를 내세우며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권력의 일탈에 순종했다. 비선 실세의 예산을 세우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은 권

력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 정부 장·차관 가운데 어느 한 명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속설을 증명했다.

환부 도려내고 미래로 가야

이것이 대한민국 집권 세력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국정 농단의 실체다. 부인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세대와 지역을 넘어 분노한 민심은 촛불을 들고 나섰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 실종과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잘못을 바로잡고 담담하게 미래로 가야 한다. 대통령 하야가 방법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신파조의 대통령 담하야 책임총리제 정도로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위기 극복의 동력은 촛불이다. 지금 믿을 것은 ‘대대론은 안 된다’는 하나 된 민심뿐이다.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 군부독재, 외환위기 등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의 저력으로 극복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장해 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이제 촛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은편칼럼



심상돈 동아병원장

광주 트라우마센터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피해 당사자와 함께 그 가족들도 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된다. 과거 민간인학살, 의문사, 고문, 폭력, 실종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30여 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유’를 위한 사업은 그동안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5·18 관련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유하고 일선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2012년 10월 18일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으로 선정되어 한해 운영비 8억700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아 광주시 직영으로 운영되었다. 물론 3년간 한시적인 시범사업이었다.

트라우마센터는 그동안 3개월 11명의 전문 인력들이 5·18 관련자 410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유와 상담을 해왔고 이용객들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1998명이 치유·상담을 받는 등 ‘필수시설’로 인정받았다. 전문 인력들도 ‘1년 기간제 근로자’라는 불안한 신분으로 매년 재계약에 해가면서 센터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센터 운영과 지원 관련 업무는 광주시 보건건강국 건강정책과가 담당해왔다. 이는 트라우마 센터가 보건복지부

의 정신건강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국가고문피해자뿐만 아니라 소말리, 경찰관 등 일반적인 트라우마 피해자들도까지도 치유하는 역할을 기대했지만 80년 5월을 겪은 광주의 역사적 상황으로 5·18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대상자의 치유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국가 정신보건 5개년 계획, 그리고 시범사업의 초기 목적과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꺼렸고, 올해부터는 정부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유’를 위한 사업이 폐지될 위기였다. 다행히 광주시에서 올해 운영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트라우마 센터의 해체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보다는 1년 연장하였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아직도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관은 광주트라우마센터 뿐이다. 이제는 트라우마 센터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전환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이고 상후스트레스장애에 치유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 소관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는 정부기관 특유의 떠밀기식 행정으로 국가적인 지원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어쩌면부터 처음부터 3년 한시 사업으로

생색만 내고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현재는 도심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번잡한 유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치유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화정동, 과거 국군광주병원이 있던 자리에 센터를 건립하는 방법, 광주시가 출연하는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좋은 방법들이다. 앞으로 센터의 독립적인 상설기구화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지자체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지원받고 그 운영은 독립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광주시가 해야할 일이 있다. 하지만 광주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단순한 물리적인 지원이 아닌 그동안 국가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사죄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속 깊은 상처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일진대, 상충을 헤집어 더 아프게 하고, 없는 상처도 국가가 새로 만들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社說

야권도 정국 해법의 로드맵 제시해야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 대표 등 야 3당 수장들이 오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회동을 갖는다. 그동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의제를 두고 만난 적은 있지만, 야당의 수장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처음이라서 어떠한 정국 해법이 제시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야당이 요구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의사를 전달한 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국 수습의 공을 야권에 던졌다는 점에서 야당 대표 회동 개최가 정국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3당 원내대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야권은 철저히 공조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거국총립 내각 구성’ 등을 둘러싼 정국 해법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단일 대안이 형성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금은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 국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고 나선 상황이다. 따라서 야권이 정국 해법을 놓고 정파적 이익에 집착,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야권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국 해법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권을 압박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국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민심을 모아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갈 리더십을 여야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에 있다는 정치권의 속설이 있다. 야당의 수장들은 이날 회동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정국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력 있는 정국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거국총립내각에서의 총리 추천과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의 탈당과 2선 후퇴 문제 등에 국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야권의 책임이자 의무다.

촛불 정국에도 외유 나선 여수 시의원들

촛불 집회로 성난 민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아랑곳없이 여수 시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민협 등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1명 그리고 무소속 의원 2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8일 일정으로 세계적인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와 싱가포르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특히 일행 중에는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과 의회 파행 과정에서 여성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원들도 이번 연수 대열에 포함됐다고 한다. 한편 또 다른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관광 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 조사·연구

분석을 명분으로 중국 심천·홍콩 등에서 해외 연수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여수시민협이 지난 1일 성명을 내며 “은 국민은 추운 거리에서 시국 선언, 여수시의회는 유람성 해외연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시민 대의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수시의회가 전형적인 외유성 관광을 다녀온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한 것이다.

의원들이 국외 연수로 선진사례를 체험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발생이 되는 형제 낭비, 관광성 외유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엄중한 시국에 외유나 즐기는 시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無等鼓

영호남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지만 음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일반적인 평가는 전라도 음식은 푸짐하고 맛있다. 그런데 반해 경상도 음식은 소박하고 짜다는 것이다.

전라도맛집 황풍년 대표는 전라도 맛의 비결로 느린 들만과 찰진 갯벌이 많아 음식 재료가 풍부하고 젓갈 등 양념문화가 발달한 것을 꼽았다. 영남대 이동순 교수는 경상도 음식이 짜고 매운 이유는 담고 습한 기후 영향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영호남 음식

영호남의 음식 차이는 전주비빔밥과 진주는 전주비빔밥과 진주경상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전주비빔밥은 콩나물을 주재료로 맑게는 30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전주비빔밥은 다섯 가지 나물에 육회 에다 늦그릇까지 포함해 ‘칠보화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소박하다. 순대를 어떤 양념과 곁들여 먹느냐만 보더라도 영호남의 음식문화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전라도에서는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대구 사람들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는다. 부산에서는 간장에 몇 가지 소스를 혼합한 ‘막장’이다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한다.

얼마 전 대구·경북 지역 기자들이 2박3일 일정으로 전라도 맛 기행을 왔다. 육전에 꽃게비빔밥, 보리굴비, 짬뽕을 맛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뿜는 감탄사는 ‘우와~’였다. 김철우 대구·경북기 자협회장은 “전라도 음식은 익은 듯 부드럽고 깊은 맛에 일품”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들어가 맛본 대표 맛집 음식에 대해 일행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음식으로 돈을 버는 곳은 경상도다. 치킨브랜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프랜차이즈가 탄생한 지역은 대다수가

경상도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식당 평가 안내서인 ‘미쉐린(미슐랭) 가이드’가 처음으로 서울 편을 발간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 맛집 24곳에 별점을 부여했는데 14곳이 한식당이었다. 에 띄는 것은 비빔밥을 파는 전주 토속 음식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미쉐린은 식재료의 품질뿐만 아니라 독창성과 가성비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 전라도 음식이 최고라는 말에 한 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기 고



이동휘 동신대 융합정보보안전공 교수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녕하십니까

암호) 등이 들어 있다. 스마트폰 본신이나 해킹시 개인 사생활 정보는 어떻게 될까? 본신, 도난 또는 중고폰을 거래할 때 안 되는 기기는 애플·블랙베리 기기와 달리 여러 번 초기화를 해도 간단한 데이터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를 원상대로 복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공개되면 안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녹음파일, 문자, 이메일 등이 유출되면 불법 거래를 통해 악의적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바로 그 조직에 의해 거래된 정보가 인질되어 돈을 요구받게 된다. 단순히 돈을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보 파일의 특성상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악랄한 방법으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 메시지 친구에게 정보를 고스란히 보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적인 정보는 절대 스마트폰, 인터넷이 연결된 PC 등에 저장되어 있으면 안 된다. 혹시 지금 스마트폰 폰에 있다면 완전삭제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삭제해야 한다.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하므로 ‘스마트 클린 인턴’이라는 인턴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애플 모바일카드드는 자동 로그인 기능과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특성에 의해 해커의 불법 사용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모 카드사 앱이 해킹되어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소비자의 과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해커는 간단한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킬 수 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서비스(카카오톡 포함), SNS를 이용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가장하여 결혼식·돌잔치·세미나·동창회 참여를 알리는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여 의심 없이 클릭하게 만든다. 사용자가 전달받은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로 감염된다.

201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랜섬웨어는 2015년 이후 정교·지능화 되어가는 추세다. 이는 PC의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대략 처음에는 50만원, 기한이 지나면 100만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지불해야만 복구해주는 악성코드이다. 최근 모바일을 타깃으로 한 랜섬웨어는 감염된 PC와 동일하게 암호화해 터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보다 비싼 몸값을 지불해야한다.

한국랜섬웨어 침해 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가지 종류의 랜섬웨어 공격이 올해 상반기 137가지 종류로 1.6배 증가했다. 올해에만 15만 명 감염, 300억 피해, 100

억 원의 비트코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권한 임의변경 금지, ‘알 수 없는 출처(미인증) 앱 설치’ 기능 해제, 스미싱 차단앱 설치, 모바일 백신 설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 보호되지 않는 무선 공유기(WiFi) 사용 금지 등 보안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식 앱마켓 이용하기, 앱 설치 시 요구권한 적절 여부 확인하기, 휴대폰 관리자 권한 활성화 금지, 모바일 백신 설치 및 점검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강도가 무장하고 은행에 들어가 돈을 훔치던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요구하는 디지털 시대를 지나, PC·스마트폰을 해킹하여 정보를 인질로 삼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앱 카드를 통해 불법적으로 돈을 훔치는 것이 가능한 스마트 시대다.

편리함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편리함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정부·은행·사업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개인보호를 내 집 단속하듯 해야하는 시점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일간) 우 61482 광주역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